

#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관련 기대효과(사례) 및 Q & A

2017. 7. 31.

금 융 위 원 회

## I 채권소각에 따른 기대효과

① (채무부담 완전해소) 소멸시효완성·사망·파산면책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경우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어 새롭게 시효가 진행되는 등 채무 부활 및 이에 따른 추심 재발생 우려

- (피해사례 1) IMF 시절 장사가 어려워져 늘어난 빚과 생활고로 20년 가까이 힘들게 지내온 A씨는 '○○대부'에서 발송한 채무변제 안내장을 받았다. 안내장 내용은 "일부 선납금만 납부하더라도 원금을 대폭 감면 해준다"는 내용이었다.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씨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기존 채무에 대한 선납금을 납부한 후 감면된 금액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대부는 매입채권추심업체로 소멸시효완성채권을 헐값에 매입하여 법률지식이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더 이상 변제의무가 없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을 부활시켜 다시 추심하는 업체였다. 업체는 A씨에 대해 다시 강한 추심을 재개하여, A씨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졌다.

- (피해사례 2) B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18년전 연체하고 상환하지 못한 카드 빚에 대한 지급명령 통지를 받았다. 법률 지식이 없는 B씨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추심업체 M대부가 다른 금융회사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지급명령을 실시한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은 소멸시효완성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실시한다.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하는바, B씨는 시효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M대부는 B씨에게 다시 강도 높은 추심을 실시하게 되었다.

⇒ 채권의 '소각'을 통해 위와 같은 피해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채무자의 부담을 완전하게 해소

② (경제적·제도적 효과) 상속인의 경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 **[피해사례 3]** 대학생 C씨는 급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친이 돌아가셨다. 어릴 적 사업을 하던 부친이 부도를 맞은 이후 십 수 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C씨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 중이다. 법학도인 C씨는 상속받을 재산은 없지만, 부친의 채무가 상당액이 있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수 십만원씩 하는 신청비용을 지불하고 한정승인을 하였다. 그러나, 알고 보니 부친의 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환의무가 없는 것이었다.

\* 상속포기 비용 : 약 13만원(인지대 5천원, 송달료 22천원, 법무사 수수료 99천원 등)  
한정승인 비용 : 약 33만원(인지대 5천원, 송달료 22천원, 신문공고비 44천원, 법무사 수수료 25만원 등)

⇒ 시효완성채권의 소각 여부를 신용정보원 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됨

③ (금융거래·생활안정 개선) 연체채무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신용도 제고 및 생활안정에 도움

- **[피해사례 4]**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D씨는 그동안 해당 지역내 유일한 금융기관인 L농협과 거래를 계속해왔으나,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로 큰 작황 피해를 겪은 이후 농업자금 대출도 갚지 못한지 오래 되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D씨는 다시 금융거래를 시작해보려고 L농협을 찾았다. 그러나 D씨는 L농협 창구의 직원으로부터 “과거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필요는 없지만, 해당 연체기록이 여전히 남아있어 신규 거래는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 **[피해사례 5]** 학창시절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했던 E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작은 치킨집이 폐업하면서 할부금 연체가 시작되었고, 이후 장기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연체상태가 계속되었다. E씨는 ○○보증 연체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최근 판매직 영업사원으로 취직했다. E씨는 영업을 위해 스마트폰을 할부 구입하고자 했으나, ○○보증은 시효 완성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연체사실을 이유로 완제하지 않을 경우 신규 핸드폰 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했고, 결국 현금으로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 시효완성채권 소각시, 전산원장에 “소멸시효 완성”이 아니라 “채무 없음”으로 표시되어, 과거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 차단

## II Q & A

### 1. 채권소각이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 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이 부활하여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잃을 위험이 있으나,
  - 채권 소각시, 채권의 부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제거되므로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감 완전히 해소

- 연체기록, 시효완성 여부 등의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여 관련 정보가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

\* 예시) 금융공공기관 등이 연체기록(소멸시효 완성 등)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금융거래 이용 제한

### 2.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민간 금융회사에 강제할 수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인지?

-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 여부 결정은 채권자인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 다만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 등이 채권을 소각한 구체적인 사례를 전파하여 자율적인 채권 소각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또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 금지를 법제화함으로써 소각을 보다 적극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임

### 3.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은 없는지?

-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경우 법에 따라 더 이상 채권자의 상환 청구권이 없고, 채무자는 상환의무가 없음
- 채무자의 상환의무가 없는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음

### 4.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현 시점에서 소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 그간 정부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추심·매각 금지(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사실상 채권소각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노력해왔음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편법적 추심이나 시효중단 조치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소각”을 실시하기로 함

### 5.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에 대부업체(채권매입추심업자)가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대안이 있는지?

- ☐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하여 재매각 금지 등 유통을 제한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시킴으로써 보유 채권을 정리토록 유도
- 또한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대부업체 스스로 불법행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신뢰도 제고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6. 시효완성채권의 소각은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것인지?

- ☐ 금번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은 새정부 출범에 맞춰 채무자 채기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
- 금번 채권 소각이 일회성 행사(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공공기관은 소각을 위한 절차 등 관련 내규 등을 정비 중
- ☐ 또한, 채무자가 상시적으로 각 금융공공기관 또는 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홈페이지를 통해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개발 중

### 7. 금융회사 등이 시효연장을 위해 무분별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소멸시효(5년) 도래시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 연장하여 15~25년 후 시효가 완성되고 있음
- ☐ 채무자의 상환능력 여부에 대한 평가 없이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겠음
-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 방안(17.3월)에 따라 시효소송 제외 사유를 정비하는 등 시효연장에 대한 기준을 既 개선
- 민간 금융회사 등도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적절한 시효연장 기준을 마련하여 취약 채무자 채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